

울산광역시 울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노미경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71
----------	-----

제출연월일: 2024. 2. 23.

발 의 자: 노미경 의원

찬 성 자: 최길영 의원, 이상걸
의원

1. 제안이유

-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안전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함.
- 또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회복 후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3조)
-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업 및 위탁에 관한 규정(안 제5조, 제6조)
-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규정(안 제8조, 제9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1

나. 관계법령: 붙임 2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발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스토킹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다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

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3.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4. 스토킹 예방·근절을 위한 군민 인식개선 교육·홍보 방안
5.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자문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및 피해자 긴급보호지원
2. 피해자 회복 증진을 위한 심리·법률상담 및 치료 등 의료지원
3.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토킹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등 물품 지원
5. 스토킹 예방·근절을 위한 군민 인식개선 교육·홍보
6.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과의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위탁) ①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7조(2차 피해 예방) ① 군수는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는 등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스톡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법률·사법기관, 의료기관, 스톡킹 피해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 의무) 스톡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및 피해자 긴급보호지원
 - 2. 피해자 회복 증진을 위한 심리·법률상담 및 치료 등 의료지원
 - 3.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 4. 스토킹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등 물품 지원
 - 5. 스토킹 예방·근절을 위한 군민 인식개선 교육·홍보
 - 6.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과의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군수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위탁) ①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지원사업의 경우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 참고: 타지자체 스톡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사업 사례

4. 작성자

-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052-204-4010)

참 고

타지자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지원사업 사례

□ [서울시] 안심장비 지원사업

- 목 적: 스토킹 범죄의 주된 행위 유형 중 하나인 주거침입을 예방하기 위한 ‘안심장비 3종’ 지원
- 대 상: 1인가구, 여성 1인점포 및 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
- 사 업 비: 총 500백만원 (20백만원 x 25개 자치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지원실적: 2023년 총 2,400여 가구 · 점포 지원, 만족도 4.5점(5점 만점)
- 사업내용: 스마트초인종, 가정용 CCTV 등 범죄예방 안전장치 제공

사업명	1인가구 ‘안심홈세트’	1인 점포 안심장비 지원	스토킹 범죄 피해예방 긴급지원
지원 내용	(필수) 스마트초인종*, 가정용 CCTV** (재량) 호신용 경보기, 창문잠금장치	음성인식 무선 비상벨 설치 · 지원 ※ 24시간 스마트 안심망 ‘안심이’ 시스템과 연계	(필수) 스마트초인종, 가정용 CCTV, 음성인식 비상벨, 디지털도어록 (선택) 문열림 램지기, 경찰용 호루라기
지원 대상	서울시 거주 1인가구 등	관내 여성 1인점주 운영 소규모 점포(네일샵, 미용실, 공인중개업소 등)	스토킹 · 데이트 폭력 범죄피해 대상자 등
시행 지역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7개 자치구(성동, 성북, 양천, 강서, 동작, 관악, 송파)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지원 기준	지역특성, 주거형태, 소득수준 등 고려하여 자치구별 자체 우선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	임대료, 규모, 범죄 취약지역 등 고려하여 선정	경찰서 연계 및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 민간 직접 신청 X

* 스마트 초인종: 휴대폰으로 현관 상황을 실시간 확인 가능

** 가정용 CCTV: 외출 시 가정 내 상황을 확인 가능

□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사업

- 목 적: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 운영
- 사 업 비: 총 406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금)
- 사업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안전 지원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 적: 주거침입 등의 위협으로부터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는 전용 보호시설 설치 · 규 모: 4개소(여성 3개소, 남성 1개소) · 보호기간: 단기(30일) ~ 최대 1년(연장가능) · 지원내용: 안전장비(CCTV, 112비상벨 등) 설치, 안심보호 개별상담,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호서 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 적: 고위험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안심동행서비스 · 지원내용: 1일 10시간씩, 총 7일간 2인1조의 경호지원(범죄 위급성에 따라 기간 조정 가능)
	이주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 적: 긴급 이사가 필요할 경우 스토킹 피해자의 이주비 지원 · 지원내용: 200만원 이내 이주비(포장 이사비) 지원
일상 회복	심리치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10회*10만원)
	법률소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법률·소송지원(심급별 220만원)
	의료비 지원	
기타	필요시 주민등록번호 변경, 개명 신청 및 열람제한 등 연계 지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연계를 통한 긴급생계비, 피해구조금 지급 등	

□ [경찰청] 민간경호 지원사업

- 목 적: 고위험 범죄 피해자에 대상에 대한 안심동행서비스
- 대 상: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 /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청
- 사 업 비: 피해자 1인당 7백만원(14일 경호 기준)
- 사업내용: 경찰청과 계약한 민간 경비업체 소속 2명이 하루 10시간, 1회 14일 이내 피해자를 밀착 보호하는 방식
- 지원실적: 98명 지원(2023년 6~12월) / 여성 91명, 남성 7명

붙임2

관계 법령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스토킹 예방·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서비스의 제공
 5.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치료회복프로그램 제공
 6.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7.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8. 피해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지원 체계의 구축
 9. 피해자 지원 기관 및 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스토킹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스톱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스톱킹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스톱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톱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스톱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스톱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스톱킹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교육에 필요한 자료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등) ① 피해자 또는 스톱킹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 또는 스톱킹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스토킹으로 피해를 입은 것 또는 신고를 한 것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
- ②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업무 연락처 및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취학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인 경우로서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등의 보호·지원과 효과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원시설의 업무)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토킹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피해자등의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 지원
3. 피해자등의 보호와 임시거소의 제공 및 숙식 제공
4. 직업훈련 및 취업정보의 제공
5. 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의료 지원
6.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7. 수사·재판 과정에 필요한 지원
8. 스토킹의 예방·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9. 스토킹과 스토킹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10.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시설에 위탁된 업무
11. 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0조(종사자 등의 자격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지원시설에서 종사하려는 사람은 전문 지식이나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교육의 실시) ①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시설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교육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간·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의무) 지원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등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9조에 따른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경찰관서의 협조) ① 지원시설의 장은 스톱킹행위자로부터 피해자등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① 사법경찰관리는 스톱킹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된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스톱킹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비밀 유지의 의무) 지원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이거나 지원시설의장이었던 자 또는 종사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벌칙) 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비밀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과태료) ①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토킹 실태조사) 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나이, 거주지역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스토킹의 발생 원인 및 배경
 3. 스토킹의 유형, 특성 및 빈도
 4. 온라인 활동 증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스토킹 현황 및 변화 추세
 5. 그 밖에 스토킹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스토킹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① 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이에 준하는 학교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단체는 제외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경영평가의 대상이 되는 지방공기업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공공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을 마련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자체 예방지침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체 예방지침과 통합하여 마련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 사건 처리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2. 스토킹 방지 조치 및 스토킹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에 따른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마련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기관 내 스토킹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공공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스토킹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또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과 결합된 사건인 경우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과 통합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키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가. 피해자등의 보호자가 피해자등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 해당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입학을 승낙해야 한다.

나. 피해자등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그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자등의 전학을 추천해야 하고,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해야 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각급 학교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피해자등이 다른 학교로 재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해야 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재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해야 한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취학에 걸린 기간은 피해자등의 출석일수에 산입한다.

제5조(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업무의 위탁)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정부출연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연기관

3. 다음 각 목의 법인이나 단체

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운영을 신고한 법인이나 단체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설치·운영을 신고한 법인이나 단체

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4.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7조(지원시설의 업무) 법 제9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시설과의 협력 업무를 말한다.

제8조(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 법 제10조제2항에서 “전문 지식이나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자격기준을 말한다.

제9조(교육의 실시)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지원시설의 장 및 상담원에 대하여 연간 8시간 이상 20시간 이하로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스토킹의 유형, 특징 및 주요 내용
 2. 스토킹 관련 법령의 이해
 3. 피해자등에 대한 의료·주거·법률상담 등의 지원 체계
 4. 피해자등에 대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과의 통합지원 및 연계에 관한 사항
 5. 피해자등의 신체적·정신적 특성과 상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③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말한다.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해

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원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취학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지원시설의 업무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 및 이 영 별표 2에 따른 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무

② 지원시설의 장은 법 제9조제5호에 따른 의료 지원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2. 제8조 및 별표 2에 따른 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
3. 제9조에 따른 교육의 시간, 방법 및 내용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톱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톱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톱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2호 생략>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공공·민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통일적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위탁”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방식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수탁자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공위탁: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 또는 공공기관(이하 “공공단체 등”이라 한다)에 위탁하는 방식

나. 민간위탁: 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하는 방식

2. “위탁사무”란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는 사무를 말한다.

3. “수탁자”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단체등과 법인등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위탁사무 및 선정

제4조(대상사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의 단순 행정사무

② 제1항제4호의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운영 및 관련 업무로 한다.

1. 복지·보건·건강·의료 시설

2. 문화·관광·체육·공원 시설

3. 교육, 공예, 공동체 관련 시설

4. 환경, 교통 관련 시설

5. 근로자복지, 취업지원, 직업훈련 관련 시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자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위탁계획) ① 군수는 제5조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위탁계획(이하 “위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및 위탁근거

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범위·내용 및 타당성

4. 위탁기간 및 조건

5.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방법

6. 수탁자의 수입·지출에 따른 보조 또는 지원 예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회 보고·동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탁사무로 의무화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단순·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②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는 위탁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5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9.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10.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수탁자 선정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선정기준의 적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시설, 장비 및 기술 보유의 정도

2. 재정 부담 능력, 책임 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고용승계·유지 및 근로조건
6. 그 밖에 군수가 운영의 투명성·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9조(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를 모집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 위탁사무명, 수탁자의 명칭, 위탁기간 등의 사항을 포함한 수탁자 선정 내용을 군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위탁사무 선정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1. 수탁자의 선정(재계약 포함)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수탁자 소속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탁사무 소관부서별로 해당 안건심의에 한정하여 구성·운영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제4항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2명 이하로 하며, 노무 관련 외부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한다.

1.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

2. 울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세무사·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최초 회의는 위탁사무 소관부서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장은 회의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③ 위원회는 필요하면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을 할 수 있고,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조사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조사 또는 감정을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제16조(수탁자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자 선정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체결)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무위탁의 목적
 2. 수탁자의 성명(법인·단체일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및 주소
 3. 위탁사무의 명칭 및 내용
 4. 위탁기간
 5. 위탁운영에 필요한 보조 또는 지원비용
 6. 수탁자의 의무
 7.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8.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사유 및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
 10. 부정 사항 확인 시 환수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위탁사무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군수는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사무의 내용, 근거, 수탁자, 위탁기간 등을 군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기간) ① 위탁사무의 계약기간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자와 협의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재계약)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계약 조건 이행 여부
2. 지도·감독 결과에 따른 조치의 이행결과

3. 위탁사무 감사 결과

4. 성과평가 결과

③ 군수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종료일 60일 전까지 제7조제3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관리 운영

제2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고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의 부당징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다른 공공단체등과 법인등에게 양도 또는 전대(轉貸)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중 그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⑤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고, 위탁사무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자의 명의로 한다.

제21조(사무처리의 지원) 군수는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이용료 징수 등)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이용료, 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을 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수입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수입금의 일부를 수탁자가 군 지정 금융기관 계좌에 납입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사무편람)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사무처리 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시설 등을 검사·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 또는 검사·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문서로 기간을 정하여 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등을 할 경우 수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5조(위탁사무 감사)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위탁계약의 취소·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 및 조례 등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제20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24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수탁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② 군수는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평가, 감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군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회계연도마다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보나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보조금 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지정한 기일 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방법) 지방보조금 중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전이나 사업연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8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① 군수는 법 제25조와 영 제14조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첨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2.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째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군수는 법 제26조제2항제4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을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령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군수는 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보조사업자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12조(포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 군수는 신청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2.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① 군수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금의 환수) ①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

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수와 관계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등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①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 당연직: 행정문화국장, 복지교육국장, 기획예산실장

2. 위촉직: 군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바.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람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보조금업무팀장이 된다.

제1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제척·기피·회피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를 준용한다.

제16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이하 증액사업

②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운용평가) ①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6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

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